

# 하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19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7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법제처 조례 개정 권고사항 및 규제개혁 과제 등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여 유통산업의 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법제처 조례 개정 권고사항 및 규제개혁 과제 등에 따라 사유요건 삭제(안 제7조)
- 나. 위원의 제척 요건 중복되어 삭제(안 제10조제4항)

##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## 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- 유통산업발전법 제40조

## 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## 7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입법예고기간 : 2018년 6월 1일 ~ 6월 20일(20일간)
- 나. 의견 내용 : 의견없음

## **8. 부서협의 결과**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## **9. 참고사항 : 덧붙임**

## **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**

# 하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하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 
이 개정한다.

제7조의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희망경제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희망경제과장 임 근 혁
	팀장 직위·성명	지역공동체팀장 강 환 천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박 대 환 (790-5642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조정의 거부 및 중지) (생략)</p> <p><u>1.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</u></p> <p><u>2.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·허가·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</u></p>	<p>제7조(조정의 거부 및 중지)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<p>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<u>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계법령 발췌서

### ■ 유통산업발전법

제40조(조정거부 및 중지)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(訴)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발 간 등 록 번 호  
11-1170000-000557-01

# 2017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



법제처

### 3

##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거부 사유 명확화

### 조례내용

#### 「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

제17조(조정거부) 위원회는 분쟁의 신청이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
2.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가·허가·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

## I. 문제점
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4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“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”만을 규정하고 있는데, 조례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규정과 유사한 사항을 각 호의 규정으로 열거하고 있어 위원회의 자율적인 조정 거부 결정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, 분쟁 조정을 원하는 주민의 입장에서조차 조정 기회가 축소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

## II. 개선방안

-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거부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주민의 분쟁 조정 기회의 확대를 통한 주민의 권익 증진

### 관련 법령

#### ○ 유통산업발전법

제40조(조정거부 및 중지)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(訴)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